

##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수행과제명 : 녹색뉴딜사업의 여성일자리 규모 추정

과제책임자 : 김영옥 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31, e-mail: youngkk@kwidimail.re.kr

### 요 약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 9개 분야에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이 창출할 일자리의 80%가 남성일자리로 추정됨으로써 여성일자리 친화적인 사업 보강을 제안함

### 1. 정책의 목적 및 필요성

- 정부는 2009년 1월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자원 재활용 확대 등을 포함한 9개 분야에 4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여 9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녹색 뉴딜(Green New Deal)’ 사업계획을 발표함. 이 발표에서 나타나는 녹색뉴딜사업의 첫 번째 특징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기재정사업이라는 점 임. 두 번째는 녹색과 뉴딜(일자리 창출용 대규모 공공투자 사업)이라는 용어를 결합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환경 및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녹색 뉴딜사업의 주요목표의 하나가 대규모의 재정투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니만큼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취업률과 취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런데 녹색뉴딜사업에서의 여성 일자리 규모는 총 176,598명으로 전체 일자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추정된 전체 일자리 수는 88만 개인데, 이는 정부가 추산한 91만개의 일자리보다 약 3만개 적은 수치임. 이 차이는 본고의 추정작업에서 당초 2009년 1월에 발표되었던 사업안과 비교하여 9월 현재 시행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사업들은 제외하였기 때문임
- 녹색뉴딜의 하위 사업별로 여성일자리의 비중을 살펴보면,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부문의 여성일자리 비중이 각각 13.6% 18.0%로 건설관련 사업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사업의 경우 R&D 및 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이 분야의 여성종사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에너지부문 여성 기술인력의 양성과 역량강화가 과제로 대두됨. 환경보호 분야에서 여성일자리의 비중이 22.8%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데, 이 분야 일자리의 대부분은 숲가꾸기 사업이나 쓰레기 수거사업과 같이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임. 따라서 향후 4년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녹색뉴딜사업으로 인해 만들어질 일자리 중 여성일자리의 규모를 늘리는 방향의 제도 보완이 필요함

## 2. 정책의 추진방향

- 첫째, 여성취업유발계수가 높은 분야를 보완하는 등 녹색뉴딜 사업계획의 수정이 필요함. 여성의 취업유발효과가 높으면서도 여타의 녹색산업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로 녹색뉴딜을 보완하고, 그 효과를 평가하여 꾸준히 재설계하는 연동계획(Rolling Plan)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방향에 맞는 대표적 사례의 하나로 여성의 취업유발 효과가 높은(남성 4.6명/10억원, 여성 8.4명/10억원) 의료 및 보건서비스 분야를 탐색할 수 있음.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건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분야임. 또한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의 하나인 천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4.1조원에

달할 정도로(최홍진, 2008) 환경오염으로 유발되는 질병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피해는 큼. 그러나 현행 녹색뉴딜사업에는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업들이 누락되어 있음. 향후 사업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보건분야와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여 패키지화해 추진한다면 녹색뉴딜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둘째, 녹색기술 분야의 여성참여 증진 방안을 마련함. 즉 여성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새로운 분야가 추가되어야 할 뿐 아니라, 기존의 녹색뉴딜사업에 더 많은 여성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본 연구의 추정 결과, 녹색뉴딜사업중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부문의 여성일자리 비중이 건설·SOC분야에서보다 더 낮게 나타남. 재생가능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증대 사업의 경우 R&D 및 기술서비스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현재 이 분야의 여성종사자 비율이 낮기 때문임. 에너지부문을 포함하여 녹색기술 분야로 여성 기술인력의 참여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 미국의 사례이지만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분야인 풍력에너지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가 60%를 넘는 고객센터 분야를 제외하고도 전통적으로 여성의 참여가 적다고 여겨져 왔던 화물·자재운송과 생산·공정관리 분야에도 많은 여성들이 진출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풍력에너지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그 시작단계에서 정책적인 배려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임. 따라서 여학생의 과학기술분야 진출 유도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 중인 WISE사업이나 여학생 공학교육 선도대학 지원(WIE)사업 등에서는 물론이고 기타 여성 공학인 육성을 위한 각종 정책지원에서 환경복원기술, 재생에너지활용기술 등 녹색기술분야가 소홀하게 다루이지 않도록 하는 배려가 필요할 것임. 또한 이렇게 육성된 재원들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이유로 사장되지 않도록 비전통적인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을 돕기 위하여 미국에서 시행되었던 WANTO(Women in Apprenticeship and Nontraditional Occupations)와 같은 프로그램과 법률을 마련하여 일

자리 유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3. 정책효과

- 이와 같이 재정사업의 편익이 특정 성에게 치우치지 않도록 보완하고, 아울러 녹색과의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은 따로 분류하거나 과감하게 정리하고 재분배하게 되면 녹색뉴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나아질 것임. 현재 녹색뉴딜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건설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관련 사업이 약 48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환경보호 분야로 약 29만개로 추산됨. 에너지관련 분야는 약 8만개로써 전체 일자리의 10%에 미치지 못함. 환경보호 분야는 공공근로내지는 일용직 근로자를 활용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므로 우리나라 녹색뉴딜사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건설업 관련 일자리 내지는 공공근로를 활용한 일자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음.
- 즉 환경보호 분야와 에너지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재정투입을 함으로써 현재 건설분야에 과도하게 집중된 것을 균형잡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고, 에너지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에너지 사용에서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녹색성장의 핵심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규모를 늘림으로써 녹색뉴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임